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3년간 전세사기로 6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의 한 아파트 부지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전남 전세사기 피해 637명

최근 3년 광주 213명·전남 424명...전국 1만 9621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시행 이후 전남 729건 사례 접수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에서도 피해자가 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만 1만 9621명=1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까지 열린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9621명에 이른다. 이들 중 외국인 피해자는 306명

(1.6%)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78.2%가 가결되고, 10.8%(2713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6%(1910건)는 적용 제외됐다.

최근 3년 간 경찰이 파악한 광주·전남 피해자는 637명=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더덕구) 의원이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전세사기 관련 피해액·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637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 지역은 2022년(1명), 2023년(212명) 등이 피해를 신고했고 전남에서는 2022년(2명), 2023년(372명), 2024년(50명·6월까지) 등 424명이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2022년 43명, 2023년 3360명, 2024년 719명 등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

이 2022년 94명, 2023년 1595명, 2024년 504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이 파악한 것과 달리, 전남도에 접수된 피해 현황은 조금 더 많다. 경찰이 특별단속 기간 중 피해자·피해액·검찰송치건수 등을 집계한 점을 감안하면 전남도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접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 729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상태로, 사실상 전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광양(332건)이 가장 많고 순천(168건), 나주(103건), 목포(60건), 무안(22건), 여수(19건) 등이다. 이외 곡성(8건), 장성(6건), 완도(4건), 영광(2건), 고흥·담양·화순·해남·영암 각 1건 등이 접수됐다.

전남도는 이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사·군과 공동으로 이사비(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자금(100만원) 등을 지급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16명에게 이사비(1400만원), 51명의 보증가입지원(1000만원)이 이뤄진 상태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 주택 전세금 총액 중 비아파트 비중 20% 수준

26조1923억...역대 두번째 낮아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의 전세금 총액 중 오피스텔, 단독 다세대,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1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전국 주택 전세보증금 총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1~6월 오피스텔, 단독다세대,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전세금 총액은 26조 1923억

721만원으로, 전체 주택 전세금 총액 126조 5914억 5381만원 중 20.7%에 해당한다.

지난해 비아파트 전세금 총액 비중 19.5%보다는 1.2%포인트 늘어난 것이지만 그동안 줄곧 20%를 웃돌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20% 밑으로 내려왔던 이후 역대 두번째로 낮은 비중이다.

비아파트 전세금 비중이 줄어든 데는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직방 관계자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전세사기가

만연하면서 아파트의 주거 상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커뮤니티 등이 갖춰진 단지형 주택 선호가 높아지며 비아파트는 거래량과 거래액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비아파트 전세액 비중도 줄어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직방측은 "올해 상반기 비아파트 전세금 비중이 다소 늘었으나 여전히 20%대 초반이고, 최근의 시장 분위기를 볼 때 언제든 다시 20%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 지난해 1인당 순자산 2억 4427만원

1년간 1.6% ↑ ...일본보다 많아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가구당 순자산이 약 2%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은과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 4427만원으로 추정됐다. 2022년 말(2억 439만원)과 비교해 불과 1.6% 많다.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에서는 가계 부문만을 따로 추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추정액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전체 순자산(1경 2632조원)을 추계 인구(약 5171만명)로 나눈 값이다.

시장환율(2023년 중 1306원·달러)로 환산한 1인당 가계 순자산은 18만 7000달러로, 미국(46만 5000달러)·오스트레일리아(39만 3000달러)·캐나다(28만 2000달러)·프랑스(23만 달러)·독일(22만 4000달러)·영국(21만 3000달러)보다 적지만 일본(18만 3000달러)보다는 많았다.

구매력평가환율(2023년 중 933원·달러) 기준으로는 한국(26만 2000달러)이 일본(22만 9000달러)뿐 아니라 영국(23만 7000달러)도 앞섰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미국(46만 5000달러)·오스트레일리아(39만 3000달러)·캐나다(29만 8000달러)·프랑스(29만 6000달러)·독일(29만 3000달러)은 우리나라를 웃돌았다.

다만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프랑스·독일·일본의 순자산과 환율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직접 비교에 다소 무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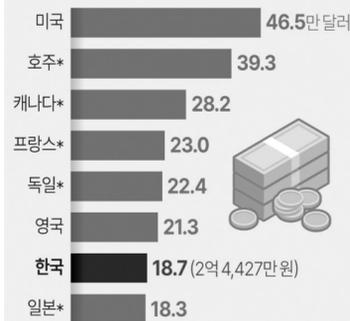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 순자산(1경 2632조원)은 전년보다 1.7%(210조원) 불었다.

집값 하락에 따라 2.3%(-147조원) 줄어든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비금융자산이 0.4%(-38조원) 감소했지만, 주가 반등 등에 힘입어 금융자산은 4.7%(+233조원) 늘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의 구성 비중을 보면, 작년 말 현재 ▲주택 50.3% ▲주택 이외 부동산 25.2% ▲현금·예금 19.1% ▲보험·연금 11.5% 순이었다.

## 주요국 1인당 가계순자산 현황

2023년 말 기준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을 추계 인구로 나눈 추정값, 2023년 시장환율(달러당 1,306원) 환산 결과



\*2022년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부동산 경기 부진과 함께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의 비중이 2022년 77.1%에서 지난해 75.5%로 떨어졌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국민순자산은 2경 3039조원으로, 전년보다 2.1%(472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폭은 2022년(3.1%·688조원)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국민순자산 증가율이 낮아지면 작년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2401조원) 대비 비율(9.6배)이 2022년(9.7배)보다 떨어졌다.

부동산(토지+건물) 자산은 1년 전보다 1.2%(207조원) 많은 1경 6841조원으로 집계됐다.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주택시가총액(6839조원)은 1.7%(-118조원) 뒷걸음쳤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비율도 1년 사이 3.0배에서 2.8배로 낮아졌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국민 대차대조표는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꾼 결과다.

/연합뉴스

#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편리해진다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한도 300만원으로

금융회사별로 달랐던 상속인 제출서류가 표준화되는 등 상속 금융자산을 인출하는 절차가 편리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8일 9개 금융업 협회와 공동으로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각각이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액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아닌 일부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하게

그간의 경제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해 한도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회사별로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해진다.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에서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하게 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090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